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0.31)

1. 한일 정상회담 관련

□ [동향]

-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 대통령 친서에는 조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짐.¹⁾

□ [일본 정부 동향]

- 일본 외무성 오오타카(大鷹) 외무 보도관은 양국 정상회담과 관련,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고 발언
- o 한 외무성 간부는 “지금 상태로는 한일 간 정상회담은 어렵다” 고 전망 하였음.²⁾
- 실제로 일본 정부는 11월 중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³⁾
- o 일본 정부는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로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인지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상회담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

2. 일본기업 자산매각 관련

□ [동향]⁴⁾

- 강제징용 배상판결(2018. 10. 30) 이후 원고 측과 후원자가 10월 3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이행을 촉구

1) 「"文대통령, 아베에 정상회담 권유 친서...日, 11월에는 보류" 『연합뉴스』(2019. 10. 30). 및 「親書で首脳会談呼びかけ 韓国大統領、安倍首相宛て」 『朝日新聞』(2019. 10. 31).

2) 「日韓、見えぬ解決への糸口、元徴用工訴訟判決から1年、資金現金化、強まる懸念、対話継続では一致。」 『日本経済新聞』(2019. 10. 31).

3) 「日韓首脳会談 来月見送り」 『東京読売新聞』(2019. 10. 30).

4) 「元徴用工ら会見、賠償履行要求 判決1年」 『朝日新聞』(2019. 10. 31).

- 소송 대리인은 자산매각 진행과 관련,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 고 전망
- 원고 측은 2019년 5월 신일철주금이 배상 명령에 응하지 않자, 압류한 회사 주식의 매각명령을 내도록 하고 한국 법원이 이를 수리한 뒤 소송서류를 신일철주금 측에 보냈지만 신일철주금은 받지 않은 상황
- o 원고 측은 “일본 외무성이 고의로 피고 측에 소송 서류를 보내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음.
- 피고 측이 서류를 받지 못해도 재판소가 직권으로 피고에게 도착했다고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취한다면 자산 매각은 가능하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원고 측은 “내년 상반기(5~6월 경)가 되어야 매각이 가능할 것” 이라고 전망
-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위안부 원고단은 당면한 문제를 UN 인권위원회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단은 일본 기업 후루카와기계금속(古河機械金屬)과 쿠마가이구미(熊谷組)도 추가로 제소⁵⁾

□ [일본 정부 동향]

- 닷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일본기업의 자산이 매각, 현금화되는 것으로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의 현금화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
- o 만약 자산 현금화가 된다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손해배상 청구 등 대항조치를 실시할 방침
- o 일본 동경대대학원의 한국정치 담당 키미야마(木宮正史) 교수는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일본 정부로서는 보복조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으며, 한일 간 경제전쟁은 현실이 될 것” 이라고 전망⁶⁾
- * 키미야마 교수는 “양국 정부가 접점을 찾는 협상이 필요하다” 면서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

5) 「韓国：国連に解決求め陳情書 元徴用工ら 「国際社会に訴える」」 『毎日新聞』(2019. 10. 31).

6) 「日韓関係 今後の見通しについて専門家に聞く」 『NHK NEWS WEB』(2019. 10. 30).